

-충청남도 외국인 농업인력제도 개선방안 모색-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개 요 >

- 때· 곳: 2023. 11. 2.(목) 14:00~16:30 / 논산시 연무하나로마트회의장
- 주 최: 충청남도의회(요청 : 윤기형 의원)
- 주 제: 충청남도 외국인 농업인력제도 개선방안 모색
- 참 석: 100여명(농민, 정책실무자, 연구자 등)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 보고서 ||

I . 총 평		1
II . 주요 토론내용		2
1. 주제발표(1인)		2
2. 지정토론(4인)		4
3. 자유토론		7
III . 토론회 도출 과제 및 결론		9
IV . 후속조치		10

-충청남도 외국인 농업인력제도 개선방안 모색-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농업 현장, 정책 실무자, 연구자의 관점에서 충청남도 외국인 농업인력제도의 현황 및 한계 분석을 통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의정토론회를 실시함.

I 총 평

- 「충청남도 외국인 농업인력제도 개선방안 모색」 의정토론회는 지방소멸과 출생률 감소로 농촌의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성장잠재력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외국인노동자 활용이 중요해진 만큼 농업인력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실시함.
- 외국인 농업인력제도의 실수요자인 농민과 정책 실무자인 시·도 관계 공무원, 연구자 등 약 100여 명이 참여하여 농가의 외국인노동자 활용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외국인노동자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함.
- 현재 충청남도의 농작물 재배에 필요한 인력수요는 약 1,564만명으로 추정되며, 이 중 자가노동력을 제외한 고용노동력은 27.3%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구인난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됨.
- 시기별 인력수요는 연중 주로 봄, 가을에 집중되며 1~2개월간의 단기 노동력이 필요한 상황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보가 중요한 것으로 분석됨.
- 따라서 농업분야 외국인노동자 활용 제도인 '고용허가제'와 '계절근

로자제'의 현황과 한계를 톺아보고, 지역맞춤형 외국인 농업인력
비자 추진체계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함.

- 특히, 농업 인력난 해소 방안으로 전북연구원에서 제시한 성실 계절근로자의 체류자격(E-8)을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전환하는 전북특별자치도형 계절근로자제에 대해 살펴봄.
- 이는 추후 충청남도에도 적용 가능한 대안으로 판단되며, 충남연구원을 통한 후속 연구와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공청회,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농업 인력 수요 대응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됨.

II 주요 토론 내용

1 주제발표(1인): 조원지 연구위원(전북연구원)

- 광역지자체의 외국인 농업인력제도 개선방향
 -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제는 비자 발급을 기준으로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 '지역특화형 비자'로 구분할 수 있음.
 - 고용허가제(비전문취업, E-9)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최장 4년 10개월간 취업을 허용하는 인력제도로 1회 연장하여 최대 3년까지 체류 가능함.
 - 계절근로자제(E-5, E-9)
 -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단기간(3개월, 5개월)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제도로 2015년 충북 괴산군과 보은군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이후 2019년 국무회의 심사를 거쳐 계절근로(E-8) 체류자격이 신설됨.
 - 프로그램 신청 주체는 기초자치단체장이며, 5개월동안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계절성이 있는 농어업에 허용됨.

○ 지역특화형 비자

- 지역의 산업, 대학, 일자리 등에 적합한 외국인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 우수인재, 동포가족을 대상으로 지역 특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해당 지역에 일정기간동안 의무적으로 거주하고 취업했을 때, 거주(F-2) 또는 동포(F-4) 비자를 선발급해주는 제도로 2022년 시범사업을 추진함.

○ 지역특화형 농업비자

- 농촌지역의 인구감소문제 해결과 농업산업 발전 및 지속가능성을 위해 발급하는 비자로 농업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비전문인력과 농업 분야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숙련기능인력 외국인 노동자가 장기간 농촌 지역에 체류하며 농업 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가함.
- 농촌지역에서 취업활동을 하는 외국인 또는 전북 소재 농업 관련 대학교(학과)를 졸업한 외국인이 농촌지역에 5년간 거주하고 농업 분야에 종사할 것을 약속하면, 거주(F-2) 비자로 전환 가능하며, 가족을 계절근로자(E-8)로 초청할 수 있고, 자녀 보육 및 교육지원과 가족지원프로그램, 사회통합프로그램등을 제공함.

○ 전북특별자치도형 계절근로자제

- 계절성이 있는 농업 부문에서 단기간 고용되어 농업 노동력을 제공하는 성실 계절근로자(E-8)를 대상으로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장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제도임.
- 8개월간 성실하게 농업에 종사하고 농가의 재고용이 보장된 계절근로자 중 안정적, 합법적으로 경제활동을 위해 장기체류를 희망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함.

- 자격요건은 첫째, 성실계절근로자(E-8), 둘째, 이들을 적극적으로 재고용하고자 하는 농가주가 있는 경우, 셋째,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전환시 4년 10개월 동안 신청지역에 거주하고 취업해야하며, 넷째, 국내외 법령 위반 사례가 없어야 함.
- 지역맞춤형 외국인 농업인력 비자 추진체계
 - 외국인 농업인력 비자 전담부서를 설치해 사업운영, 정책사업 발굴 및 추진, 외국인노동자 DB 구축과 관리, 지역맞춤형 외국인 농업인력 비자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이 가능함.

2 지정토론(4인)

① 양두규 과장(충청남도 농업정책과)

□ 충청남도 농업인력 대책(외국인 계절근로자 포함)

○ 충청남도 외국인 노동자 현황

- 도내 합법적 근로자는 8천명으로 고용허가제 4.7천명('23.6 기준), 계절근로자 3.3천명('23.9 기준) 정도로 추정됨.
- 고정인력 확보가 필요한 대규모 축산 및 시설재배 농가 등은 고용허가제를 활용하고 있으며, 단기인력 확보가 필요한 과수류, 노지채소 농가의 경우는 계절근로자를 활용하고 있음.

○ 농번기 인력수급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23.9월말): 3,302명
- 계절근로자 도입 MOU 추진 6개국 25개 지자체

○ 앞으로 추진계획(외국인 계절근로자 부분)

-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단위 중간조직 육성 추진
-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확대: 2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
- 농촌인력증개센터(공공형 확대): 시군별 1개소 이상 구축

② 정기영 팀장(논산시 농촌인력지원팀)

□ 논산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현황

- 초단기(1~10일 이내), 5~8개월, 상시 등 인력 필요 시기가 농가 영농 조건에 따라 다양
 - 2023년 6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1회 입국으로 최대 8개월까지 체류 가능
 - 연간 입국 횟수에 제한이 없어 출국 후 연내 재입국 가능(연간 최대 11개월 체류 가능)
 -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통해 단기 인력 필요 농가에 노동력 제공
- 계절근로자의 업무 숙련도가 인력사무소나 기존 인력에 비해 현저히 떨어짐
 - 업무 초기 숙련도 부족을 감안하여 계절근로자 고용 필요
 - 근무기간 5~8개월, 외국인노동자 재입국을 통해 해당 농가에서 재고용 가능하므로 외국인 노동자의 숙련도 증가
- 계절근로자를 활용하고 싶으나 노동자의 숙소를 농가에서 제공해야 하는 어려움(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 개조 숙소 불가)
 - 계절근로자를 초청한 결혼이민자의 주택을 숙소로 활용가능하므로 농가 부담 경감, 결혼이민자 및 노동자의 정서적 안정
 - 공공형 계절근로자사업 추진을 통해 운영주체(연무농협)가 숙소 구비함으로써 농가 부담 경감
-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확대 필요(시군 희망 시 시군별 2~3개소 선정)
- 강화 된 숙소 요건으로 숙소 구비에 대한 농가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대안 마련 필요

③ 최용재 조합장(연무농협)

□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 운영 결과

- 농협은 지자체가 선정한 계절근로자 운영주체로서,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계절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필요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함.
- 논산시는 몽골(날라이호구시)과 MOU를 맺고, 총 33명의 계절근로자(E-8)가 입국함.
- 인력 가동률은 5월 기준 86.4%로, 전국 19개 지자체 중 2위이며, 인건비는 319,055,958원 소요됨.
- 계절근로자의 작업 능력 미숙 등으로 입국 초반 농가의 불만이 제기되어 입국 초 2주 정도의 실습기간을 두어 인건비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 등의 적용에 따라 인건비 손실이 큰 상황으로,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70%로 설정한 사례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외국인노동자 입국 후 마약검사 및 외국인 등록증 발급 등 농협에서 수행해야 할 후속작업에 대한 부담이 있는 상황으로, 지자체의 행정 대행 및 행정절차 간소화 등의 협조가 필요함.

④ 이대현 대표(오토팜)

□ 농업 제도, 손잡고 미래로 나아가다

- 농업현장에서는 '숙련근로자의 유지', '외국인 숙소문제 해결', '불법근로자 단절', '파견근로가능'이 요구되고 있음.
 - 숙련근로자의 유지: 숙련된 근로자를 장기적, 안정적으로 고용하는 것은 농업인 간의 상생적인 관계 형성과 상호간 수익 상승에 도움이 됨.

- 외국인 숙소문제 해결: 현 제도상의 규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농촌에 정식허가된 건물을 구하기 쉽지 않고, 신축 비용 부담이 커 규제 완화가 필요함.
- 불법근로자 단절: 불법근로자 단절을 통해 부족한 인력을 정식 근로자로 대체하며 인건비 상승을 해소할 수 있음.
- 파견근로: 현재 파견근로가 불가능하나 농가에 일이 없을시 근로자 유지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파견근무를 허용해야 함.

3 자유토론

□ 고용허가제 강화 필요(이대현 오토팜 대표)

- 계절근로자제도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들은 근무 기간이 짧은만큼 업무에 임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음. 계절근로자제보다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장기 체류가 가능한 인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논산시가 출입국관리사무소, 고용노동부와 협약을 통해 농민들이 고용허가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에 힘써야 함.
- 현재 외국인노동자에게 월 급여를 약 250만원씩 지급하는데, 불성실한 단기 근로자의 급여보존을 해주어야 하니 주객이 전도된다고 판단될 때가 있음.
- 보다 장기적으로 활용 가능한 고용허가제를 통해 성실근로자들은 더 장기적으로 농가에서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외국인노동자 운용상 문제(딸기농장 운영자 A 씨)

- 농촌근로자에게 일반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급여를 책정하는 것이 현실과 괴리가 있음.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여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함. 시급은 해마다 오르고, 퇴직금까지 마련 해주어야 하는데 현실 적용이 어려움. 차라리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게 낫다는 말이 나올 정도임.

- 외국인노동자들이 불법체류자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음. 이탈한 사람들이 어디로 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도 추적이 되지 않음.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이 필요함.
- 농가에 온 외국인근로자들은 일이 더 편하고, 급여가 높은 공장으로 이탈하는 경우도 많음.
- 고용허가제도 수요에 비해 공급가능인력이 턱없이 부족함. 신청 과정도 복잡해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농가에서는 신청조차도 쉽지 않은 상황임.
- 외국인노동자제도 운영시 행정 편의성 중심이 아닌 정책의 실수요자인 농가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함.
- 불법체류자들 중 성실근로자들을 일부 양성화시키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함.

□ 외국인계절근로자제 안착 필요성(잎채소 작목 회장 B 씨)

- 만들어진 제도에 일부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없애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면 좋은 제도도 실효성이 떨어짐. 제도가 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개선해가는 것이 오히려 안정적으로 제도가 정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 계절별로 일자리 수요가 다른 특성을 고려하여 계절근로자제가 마련된 것은 공감함.
- 잎채소의 경우 가격 널뛰기가 심한데 가격이 떨어졌을때는 농사를 짓지 않는 등 공급을 조절하는 방식을 적용해야 하지만 계절근로자 임금 보전을 위해 생산을 하다보니 과잉생산을 불러일으켜 악순환이 발생할 때도 있음.

- 계절근로자의 경우 숙련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일을 가르치는데 최소 한달 이상이 소요되고 인력 이탈도 심각함.
- 외국 사례처럼 일손 수요가 극심할 때 불법체류자들을 찾아 추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Tax ID를 부여하여 불법체류한 기간에 대한 벌금을 매기고, 일을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융통성 있는 인력확보가 필요함.
- 숙소 문제도 농촌의 빈집을 고쳐서 숙소로 쓸 수 있도록 현 규제를 일부 완화할 필요가 있음. 외국인노동자를 먹여살리는 농민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과 관심이 절실함.

Ⅲ 토론회 도출 과제 및 결론

- 농가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한 외국인근로자 활용 제도의 개선을 위해 농업 종사자와 정책실무자, 연구자 간의 토론을 통해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 운영상의 문제점을 짚어봄.
- 농가의 계절별 탄력적 외국인노동자 인력 활용을 위해 계절근로자제가 도입되었지만, 저숙련노동자를 숙련시키기 위한 시간과 비용 지출, 농가의 현실과 괴리가 있는 법정 최저임금 기준의 임금책정 및 숙소기준, 불법체류자로의 이탈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안정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임금 책정, 숙소 요건 등 제도의 규제적 측면 완화에 대한 농업종사자들의 요구가 있었음. 또한 성실근로자의 장기체류에 대한 필요성은 농가와 연구진, 공직자 모두 공감하고 있었음.
- 따라서 계절근로자를 장기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충남형 계절근로자제'에 대한 도입 가능성 검토가 필요하며, 지자체 사무 범위를 벗어나는 범위의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N 후속조치

- 의정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내용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도출과제에 대한 후속 관리가 필요함.
- 2023년 7월 발간된 「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고용·노동 실태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연구」와의 연계를 통한 정책 반영을 고려할 수 있음.
- 충남연구원을 통한 후속과제 발굴 및 농가의 외국인근로자제 안착을 위한 정책 대안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됨.

참고1

토론회 사진



개회사



토론진행(윤기형 의원)



주제발표(조원지 연구위원)



주요 내빈 및 참석자



지정토론 및 자유토론

참고2**언론보도 현황(2023. 11. 2~3.)**

구분	제목	매체명
1	윤기형 의원 “농촌 현실에 맞게 외국인력 계절근로자 활용 제도 손봐야”	농민신문
2	윤기형 의원 “농촌 현실에 맞게 계절근로자 등 외국인력 활용 제도 손 봐야”	프라임경제
3	윤기형 충남도 의원 “농촌 현실에 맞도록 외국인력 활용 제도 손 봐야”	세종방송
4	충청남도의회, 2일 논산서 ‘2023 의정토론회’ 개최	중도일보
5	충남도의회, 외국인 농업인력제도 개선방안 모색	금강일보
6	외국인 농업인력제도 개선 방향은?	중도일보
7	충남도의회, 외국인농업인력제도 개선 논의	한국농어민신문
8	도의회, 외국인 인력제도 개선방안 모색	투데이충남
9	충남도의회, 외국인 농업인력제도 개선방안 모색	세계타임즈
10	충남도의회, 외국인 농업인력제도 개선방안 모색	범죄예방신문
11	충남도의회, 외국인 농업인력제도 개선방안 모색	이플러스뉴스
12	충남도의회, 외국인 농업인력제도 개선방안 모색 위한 의정토론회 개최	금강투데이
13	충남도의회, 외국인 농업인력제도 개선방안 모색	뉴스티앤티

외국인 농업인력제도 개선방안 모색

충남도의회 의정 토론회 개최
농촌 현실 맞는 제도손질 촉구

충남도의회는 2일 외국인 농업인력 제도 의정토론회를 열고 개선 방안 등을 모색했다. 토론회는 인력 유출과 고령화로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농촌의 외국인 인력 현황을 파악하고 충남도의 외국인 농업인력제도 현황 및 한계 분석을 통한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의원이 최장을 맡았으며 조원지 전 북연구원 연구위원이 '광역지자체의 외국인 농업인력제도 개선방향'이란 주제 발표를 했다.

이어 양두규 충남도 농업정책과장, 정기영 논산시청 농촌인력지원팀장, 최용재 연무농협 조합장, 이대현 오토팜 대표가 패널토론을 통해 충남도와 논산시의 농촌 외국인인력 활용 현황을 짚어보고 구조적 개선을 위한 의견을 공유했다. 윤 의원은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 유지를 통한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며 "정부가 계절근로자 제도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농촌 현실에 맞지 않아 개선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내포-이석훈 기자 ibook@ggilbo.com

충남도의회, 외국인 농업인력제도 개선방안 모색

뉴스티엔티 | 이용환 | 2023-11-02 19:22 (목) | 토크보기

이용환 기자

외국인 농업인력제도 현황과 한계 분석 통해 지원방안 논의
좌장 윤기형 의원 "농촌 현실에 맞게 계절근로자 등 외국인력 활용 제도 손 봐야" 강조



충남도의회는 2일 충남도의 외국인 농업인력제도 현황 및 한계분석을 통한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충남도의회 제공



도의회, 외국인 인력제도 개선방안 모색

충남도의회도 외국인 농업인력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력 유출과 고령화로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농촌의 외국인 인력 현황을 파악하고, 농업 현장, 정책 실무자, 연구자 관점에서 충남도 외국인 농업인력제도 현황과 한계분석을 통한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기형 의원을 좌장으로, 조원지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이 '광역지자체의 외국인 농업인력제도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 양두규 충남도 농업정책과장, 정기영 논산시청 농촌인력지원팀장, 최용재 연무농협 조합장, 이대현 오토팜 대표

가 패널토론을 진행하며, 충남도와 논산시의 농촌 외국인인력 활용 현황을 짚어보고 제도의 구조적 개선을 위한 의견을 공유했다.

윤 의원은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 유치를 통한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며 "정부가 계절근로자 제도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농촌 현실에 맞지 않아 개선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남 전체 농가의 외국인인력 제도 개선을 위해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도의회 차원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내포/이예슬 기자

외국인 농업인력제도 개선 방향은?

충남도의회, 논산시 의정토론회

충남도의회는 2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논산시 연무농협 하나로마트 2층 대회의실에서 '충청남도 외국인 농업인력제도 개선방안 모색'이란 주제로 2023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윤기형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주제발표와 지정토론, 자유토론, 청중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윤기형 충남도의원은 개회사에서 "오늘의 토론회는 급변하는 농촌의 상황에서 외국인력 활용제도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충남의 농촌이 직면한 문제들이 허심탄회하게 논의되고, 그 결과가 도정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 발제는 조원지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이 '광역지자체의 외국인 농업인력제도 개선방향'과 관련,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제, 지역특화형 농업비자, 전북특별자치도형 계절근로자, 지역맞춤형 외국인 농업인력 비자 추진체계 등을 상세하게 소개했다.

이어 충남도 양두규 농업정책과장은 '충청남도 농업인력 대책'을, 논산시 정기영 농촌인력지원팀장은 '논산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현황', 최용재 연무농협 조합장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 이대현 오토팜 대표 '농업 제도, 손잡고 미래로 나아가자'란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논산=장병일 기자